

생활 고통지수 광주 전국 2위

LG경제연구원, 물가+실업률 10.8... 전년보다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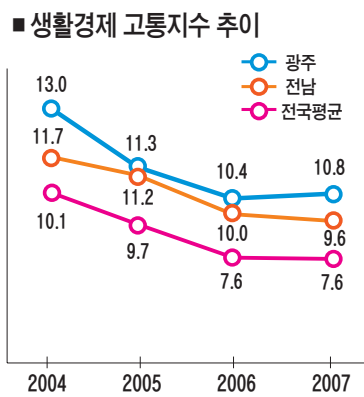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광주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두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올 초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합쳐 산정하는 생활경제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광주는 10.8로, 서울 11.0보다 0.2 적은 2위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광주의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전년(10.4)보다 0.4 포인트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9.6)에 비해 무려 1.2 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전남은 지난 2004년 10.1을 기록한 이후 2005년 9.7,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7.6으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러 경제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지난해 10월 9.9에서 11월 10.8, 12월 11.0으로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9.4를 기록했던 고통지수는 3·4분기에는 9.2를 기록했으나,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여 연평균 9.6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고통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로 생활물가의 불안정을 들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1.9%에 이어 상반기까지만 해도 3% 중반을 밑돌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연말에는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다. 이는 석유나 곡물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 생활경제 고통지수=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합쳐 산정한다. 생활물가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품 154가지의 물가를 나타내며, 체감실업률은 주당 17시간 미만 근로자를 실업자로 분류해 계산한다.

반면 지난해 체감실업률은 6.5%로 2006년 6.7%에 비해 소폭 하락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체감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공식 실업률이 3.5%에서 3.2%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여건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서울(11.0), 광주(10.8)에 이어 대전(10.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7.6)과 경북(7.8), 제주(8.6), 강원(8.7) 등은 상대적으로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낮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남광주시장 설 대목 "참 싸네"

3일 재래시장인 광주시 남광주시장에 설맞이 고객들이 몰려 복새통을 이루고 있다. 재래시장의 제수비용이 백화점이나 할인점보다 30%나 저렴해 생선·나물류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靑 수석 로스쿨 개입’ 수사해야

조선대 교직원·동문 등 700여 명 상경 향의 집회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로스쿨 선정 개입 의혹(본보 2일자 1면)과 관련, 윤 전 수석과 청와대가 근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구나 불과 한달여 전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지역간·대학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전호선 홍보수석은 지난 2일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에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윤 전 수석 발언과 관련, "청와대 차원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 출신 인사가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스쿨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시스템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홍보수석 출신 인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수석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고향 분들에 게 (로스쿨 선정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 조금 과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수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의견은

제시했다"고 주장,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수석의 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 등 탈락대학들의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조선대 교직원 및 수도권 동문 등 700여명은 휴일인 3일 상경,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전면백지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로스쿨 탈락대학들의 법적 조치도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일 학교법인 조선대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로스쿨 선정관련 각종 서류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는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이들 대학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 및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등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탈락대학들은 4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발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휴대전화 요금 인하’ 후퇴

인수위, 가입비·기본료 등 현행대로 유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통신서비스요금 인하와 관련, 가입비와

기본료 등 요금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가입료와 기본료를 손 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가입비와 기본료 등의 요금체계를 직접 건드리지는 대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도입(이상 9월), 3세대 단말기(WCDMA) 단말기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 해제

(6월) 등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한 간접적인 가격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오는 9월 SK텔레콤과 KT 등 선발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며, 같은 달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요금 인가제는 요금인하 여력이 큰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KTF와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후발사업자들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통제해 온 정책이다. /연합뉴스

로스쿨 25곳 확정하되

지역 배려 재논의키로

교육부·靑 협의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되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이나 정원 확대 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막판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협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라며 "일단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 발표하고 추후 협의의 사항으로 추가 선정 시

점을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명시할 것인지, 여기에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거론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 선정한다면 기존 예비 인가 대학의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일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로스쿨 법 개정 등을 통해 정원 확대 및 예비인가 대학 추가 선정 방향으로 협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LANEIGE